

보도	2024.2.28.(수) 10:00	배포	2024.2.27.(화)	
담당부서	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	책임자	국 장	이 진 (02-3145-8170)
		담당자	부국장	김정훈 (02-3145-8180)

이복현 금융감독원장, 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

- 금년도 금융산업의 새로운 트렌드 및 금융시장 리스크요인 논의 -

I 간담회 개요

-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월 28일(수)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'24년 금융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논의하고, 금융시장의 대내외 주요 리스크요인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음

- ☑ 일 시 : '24. 2. 28.(수) 10:00 ~ 11:00
- ☑ 장 소 : 여의도 켄싱턴 호텔
- ☑ 참석자 : (금감원) 금융감독원장, 부원장보(전략감독)
 (연구기관) 박종규 금융연구원장,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,
 안철경 보험연구원장,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,
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소장

II 주요 논의내용

(1부. 금융산업 새로운 트렌드)

- 연구기관장들은 '24년 금융권이 주목해야 할 금융산업 트렌드로 ①인구구조 변화, ②기후금융, ③사이버 보안, ④AI 금융, ⑤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선정하고,
- 인구구조, 기후변화 등 이미 예견된 미래의 위험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
 - AI금융 등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면서 사이버 보안도 강화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

□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미래 금융산업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음

- **인구구조 변화**가 가져올 사회·경제 및 금융산업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,

부동산 및 이자수익 중심의 現 금융산업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할 기회로 **활용***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조직을 신설**하여 대응하고 있으며,

* (예시) 자본시장 활성화로 자산축적 수단 변화(부동산→자본시장), 은행산업 이자수익 의존도 감축 및 경쟁확대, 보험산업 주력상품 변화(생명보험→연금) 및 상품 다양화 등

** '24.1월 미래금융연구팀 신설

- 우리나라의 **기후금융** 대응 노하우*를 동남아 감독당국 등에도 적극 전파하는 등 K-금융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여 가고 있다고 설명

* K-택소노미(녹색분류체계)의 금융권 적용 시스템 개발 등

- 또한, 금융회사의 **사이버 위협** 대응역량을 강화하고, 안전한 **AI 금융서비스** 활용환경을 조성하는 한편,

-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**주주환원 활성화**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음

(2부.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)

□ 연구기관장들은 예상보다 견조한 세계경제 성장 및 금리인하 기대감 등 우호적인 경제여건이 조성될 수 있으나,

-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, 높은 가계부채, 취약차주 금융부담,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리스크가 산재한 상황으로
- 금융감독 당국의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하였음

-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며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, 시장불안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음
 - 먼저,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 쌓고 신속히 정리·재구조화하여 부실 사업장에 묶인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배분되도록 유도
 -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는 DSR 제도를 내실화하여 채무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확립하고, 이를 통해 GDP대비 가계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
 - 경기회복 지연,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다중채무자 채무상환 능력 악화에 대비하여 공적·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차주의 신용회복 및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
-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, 그간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도 많이 확충해 왔으므로
 - PF 연착륙 방안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
 - 아울러, 정확한 통계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막연한 위기감 조성보다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지속 소통하자고 제안하면서,
 - 금일 제시된 의견은 향후 금융감독원 업무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하였음

[참고] 연구기관장이 선정한 '24년 금융산업 새로운 트렌드

구분	주요 내용
인구 변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❖ 기술발전과 젊은 세대의 적극적 투자 성향을 이용하여 인구구조 변화를 금융산업 체질개선의 기회로 삼을 필요 ❖ 부동산 및 이자수익 중심의 現 금융시장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할 기회
기후 금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❖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 및 금융회사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, 우리 금융권의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할 필요 ❖ 저탄소 경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 ESG컨설팅 확대 등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중요
IT 보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❖ 금융보안 유관기관과 사이버 보안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이버 위협 정보 전파체계 구축 필요 ❖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모의 침투 훈련을 통해 금융회사의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강화 필요
AI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❖ 금융회사는 고객관리, 신용평가, FDS 등 다양한 업무에 AI 금융 서비스를 적극 도입 중 ❖ AI가 금융혁신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금융권, 산업계 등과 소통을 강화하여 AI 금융서비스 생태계 확장을 지원할 필요
주주 가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❖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주주환원 제고가 필요 ❖ 주주친화적 자사주 정책, 배당확대,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며, 경영권 방어 수단 방지를 위해 자기주식 처분의 공정성 강화 조치도 필요

※ [별첨]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 1부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1**박종규 금융연구원장**

□ 인구구조변화와 저탄소 경제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

○ 향후 30년간 인구감소 및 고령화라는 인구구조변화의 큰 흐름은 “정해진 미래”로 받아들여야 하는 가운데,

- 금융회사의 경영실적 위축 및 수익성 악화 가능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, 이에 따른 수익원 다변화,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

○ 저탄소 경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중요

2**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**

□ 국내 주식시장은 저평가 이슈와 저조한 주주환원으로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어 주주환원 제고가 필요함

○ KOSPI의 PBR는 주요국 대비 하위권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주친화적인 자사주 정책, 배당확대,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

○ 또한 기업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여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에 기업의 자발적인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고 자기주식 처분의 공정성 강화 조치가 필요

3

안철경 보험연구원장

- 사이버위협은 상호연결성이 높은 정보통신의 특성에 기인하며, 사이버위협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

* 미국 연방정부는 민관 공동 대응의 국가사이버보안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고, 2023년 뉴욕주는 금융회사에 사이버보안요건을 요구

- AI와 블록체인 등 정보기술의 고도화와 상호연결성 외에 원격근무 환경으로 인한 랜섬웨어(ransomware) 등 사이버위협에 취약한 환경이 확대되고,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소송 위험도 커지고 있음

4

허용식 현대경제연구원장

- '24년 국내 금융시장은 금융의 디지털 혁신·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안정성 또한 높여야 하는 상황

-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 신뢰성 강화, 대외 리스크 국내 전이 예방, 對 중국 리스크 대응력 확충, 철저한 민간신용 리스크 관리 등을 강화할 필요

5

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소장

- AI 기술의 효과적 활용,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등 금융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업계와 금융감독 당국의 협력이 요구되는 시기
-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와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